이달의 초점

한국의 사회이동성

사회이동성에 대한 국민인식과 시사점

| 장윤선, 김태완 |

소득이동통계를 이용한 사회이동성 진단

| 권신정 |

자산이동성에 대한 탐색적 분석과 함의

| 이주미 |

일자리 이동 추이 및 결정요인 분석: 고용 형태를 중심으로

| 임완섭 |

세대 간 사회적 관계의 이동성 분석

| 김기태 |

한국보건사회연구원

KOREA INSTITUTE FOR HEALTH AND SOCIAL AFFAIRS

 DOI: 10.23062/2026.06.4

자산이동성에 대한 탐색적 분석과 함의[1)]

An Exploratory Analysis of Asset Mobility

이주미 한국보건사회연구원 사회보장정책연구실 부연구위원

이 글에서는 교육, 직업, 소득 등과 같이 노동시장 성과와 분리되어 세대 간 이전이 용이하고 상위 계층의 지위를 공고히 하는 '자산'의 특성에 주목하여 한국 사회의 자산이동성을 탐색적으로 분석하였다. 한국복지패널 자료를 활용해 세대 내 및 세대 간 자산이동성을 분석한 결과 세대 내 분석에서는 5년 주기에 비해 10년 주기에서 시간 누적 효과로 인한 계층·세대별 양극화와 구조적인 계층 고착화가 더욱 선명하게 확인되었다. 또한 세대 간 분석을 통해 부모의 소득계층이 자녀의 초기 자산 분위 결정에 영향을 미치며, 소득계층이 자산 계층으로 전이·대물림되는 구조를 일부 확인하였다. 이러한 결과는 자산이동성을 일시적 변동이 아니라 장기적·구조적 관점에서 진단할 필요가 있음을 시사한다. 자산이동성에 대한 탐색적 분석으로 향후 자산이동성 분석의 확장을 위한 함의를 도출하고자 하였다.

1 들어가며

영국의 사회이동성위원회(SMC: Social Mobility Commission)[2)]는 사회이동성을 개인의 직업이나 소득과 부모의 직업이나 소득 간 연결고리로 설명한다. 이들은 불평등과 사회이동성 모두 중요한 문제로 인식하고 있지만, 두 현상은 다른 의미를 내포하고 있다고 설명한다. 예컨대 사회이동성을 개선

1) 이 글은 김태완, 김기태, 김문길, 임완섭, 이주미, 조보배, 장윤선, 김한나, 박형존, 윤상용, 이석민, 권신정, 김우성. (2025). 한국의 사회이동성 진단과 사회정책 개편방향 연구(한국보건사회연구원)의 5장을 요약, 발췌하여 작성한 것이다.

2) 2010년 「the Life Chances Act 2010」을 근거로 설립된 독립적 법정 기관(의회 법령에 의해 설립된 조직)이다. 2016년 「복지 개혁 및 노동법(Welfare Reform and Work Act 2016)」에 따라 이 위원회는 이전에 사회이동성 및 아동빈곤위원회(Social Mobility and Child Poverty Commission)라고 불렸던 기구의 연장선상에 있다(Social Mobility Commission 홈페이지, n.d., https://socialmobility.independent-commission.uk/).

하지 않고도 불평등을 줄일 수 있다. 이동성을 개선하지 않고도 '상위'와 '하위' 사이의 격차를 줄일 수 있다는 의미이다. 반대로 불평등을 줄이지 않고도 사회이동성을 개선할 수 있다. '하위'에서 '상위'로 더 많은 비율의 사람들을 이동시킬 수 있지만, 두 계층 사이의 격차는 증가할 수 있는 것이다. 불평등을 우리가 해결해야 할 사회적 문제로 인식하고 있듯이 사회이동성 역시 한 개인이 장애물을 직면하더라도 어떻게 얼마나 잘 벗어날 수 있는지 개인의 능력 향상과 직결되는 문제이기 때문에 주목할 필요가 있다는 것이다(SMC, 2023, pp. 4-5). 특히 사회이동성은 일정 특정 계층(소수)만이 아니라 모든 사람을 위한 접근, 모든 사람의 기회 가능성에 대한 문제이다(SMC, 2023, p. 14). 인생의 시작점에 주어진 물적·인적 자본이 기회를 형성하는 데 영향을 미칠 수는 있지만, 최종적으로 어디로 가게 되는지 결정해서는 안 된다는 것이다(SMC, 2023, p. 14). 즉 개인이 성장한 장소나 가족 상황과 같은 배경에 의한 결과가 아니라 개인의 잠재력, 개인적 선택과 노력이 한 개인의 결과를 결정하도록 해야 하는 점에서 사회이동성은 중요한 의미를 가진다(SMC, 2023, p. 14).

이론적 관점에서 사회이동성과 강하게 연관될 것으로 예상되는 불평등의 개념은 '기회 불평등'이라고 볼 수 있다(Iversen et al., 2021, p. 15). 이 개념은 개인 간의 경제적 지위의 차이와 관련이 있는데, 개인적 상황의 차이로 연결될 수 있다. 여기서 개인적 상황은 개인의 경제적 지위에 영향을 미치는 환경의 측면이다(Roemer, 2004). Becker와 Tomes(1979)에 따르면 가장 중요한 개인적 상황은 부모의 배경이 된다. 이처럼 부모의 소득, 교육, 직업과 같은 사회경제적 지위(SES: Socio-Economic Status)는 개인의 삶의 기회를 결정하는 주요한 요소들이다. 이러한 점에서 사회이동성 관련 기존 연구들에서는 대부분 직업과 교육, 소득에 초점을 두고 다루어 왔다(Glass, 1998; Goldthorpe et al., 1987; Heath & Li, 2023).

SES는 계층적 사회구조적 지위를 나타내는데, 소득, 교육, 직업의 차원이 SES의 전체성을 나타내기에 완벽하지 않은 점에서 이들 차원과 함께 부(wealth)의 영향에 대해 주목하기도 한다(Hällsten & Thaning, 2022). 자산은 활동적인 노동 없이도 소득과 가치를 창출할 수 있는 자산에 대한 수익을 기반으로 형성되는데(Hällsten & Thaning, 2022, p. 1534), 이에 대해 Mill(1848/1885)은 "in one's sleep(잠자는 동안)"에도 소득을 창출한다는 표현으로 자산의 특성을 설명하기도 한다. 반면 교육, 직업, 소득은 모두 노동시장 경력의 한 축이라는 공통점을 가지고 있다. 교육은 진입의 위치를 결정하고, 직업은 노동시장의 전반적인 순위를 측정하며, 소득은 경제적 수익을 요약한다(Hällsten & Thaning, 2022, p. 1534). 그러나 부는 반드시 노동시장과 밀접한 관련이 있는 것은 아닐 수 있으며, 주로 많은 부 혹은 자산은 세대 간 이전(Adermon et al., 2018; Boserup et al., 2018)을 통해 발생하거나 투자 수익으로 발생하기 쉬운 구조이다. 이러한 점

에서 자산을 배제하게 되면 세대 간 불평등을 과소평가할 수 있다. 표준적인, 예컨대 소득, 직업, 교육과 같은 사회경제적 지위 변수와 비교하여 자산은 개인의 노력과 노동시장에서 더욱 분리되어 있어 세대를 거쳐 더 쉽게 이전될 수 있는 엘리트 계층의 지위를 의미하기 때문이다(Hällsten & Thaning, 2022, p. 1534).

소득이 일정 기간 형성되는 흐름의 개념으로 유량(flow)에 속한다면 자산은 특정 시점에 보유하고 있는 금액, 즉 저량(stock)의 개념으로 보통은 이해할 수 있다. 자산은 개인이나 세대가 시간이 지남에 따라 활용할 수 있는 자원인 셈이다. 소득에 비해 유동성이 낮거나 적을 수 있지만, 소유자에게는 물질적인 안정을 제공한다(Clark, 2024, p. 11). 물론 직접적인 영향은 '소득'에 있을 수 있지만, '자산'은 소득을 창출하는 하나의 수단이 될 수 있다. 이에 대해 Berman과 Milanovic(2023)는 자본과 임금소득을 모두 풍부하게 누리는 것을 설명하기 위해 동일성을 나타내는 'homo'와 부와 재산을 나타내는 'ploutos'를 합쳐서 '호모폴리티아(homoploutia)'라는 용어를 사용하기도 하였다(Berman & Milanovic, 2023). 더욱이 부유층의 자녀가 더 많이 상속받을 뿐만 아니라 이러한 부모의 소득과 자산으로 더 많은 임금을 받게 되는 구조라면 사회적 경직성이 더욱 커질 것으로 생각된다. 즉 자산(wealth)은 세대를 거쳐 지속되는데, 특히 상위 계층에서 소득보다 더 강하게 지속된다는 점에서 계층이동에서 더욱 논의될 필요가 있다(Fagereng et al., 2021). 따라서 이 글에서는 자산이동성에 대해 주목하고 탐색적 분석을 통해 자산이동성 분석 확장의 함의를 도출하고자 하였다.

2 이론적 논의

가. 소득 및 자산 이동성의 개념과 측정 방법

사회이동성은 시간의 흐름에 따라 개인이나 가구의 경제적 지위가 상향 혹은 하향으로 이동하는 현상을 말한다. 즉 개인의 사회경제적 상황과 미래 삶의 결과 사이의 관계를 말한다(Huband-Thompson, 2024, p. 10). 이동성의 유형에 따라 개인의 생애주기 내 지원 변화, 즉 한 개인이나 가구의 시간에 따른 소득(또는 자산)이 변화하는 '세대 내 이동성(intragenerational Mobility)'과 부모와 자녀 간 경제적 지위가 변화하는 '세대 간 이동성(intergenerational Mobility)'으로 구분된다.

또 다른 측면으로 이동성의 측정에 따라 절대적 이동성과 상대적 이동성으로 구분될 수 있다(Huband-Thompson, 2024, p. 11). 사회이동성은 두 계층 간의 세대 간 이동 경로를 의미한다고 볼 수 있는데(Hertel, 2017, p. 14), 이를 절대적 이동성과 상대적 이동성 두 가지 관점으로 구분하여 설명하기도 한다(Erikson & Goldthorpe, 1992; Hertel, 2017, p. 14). 첫 번째 관점은 이동 경로를 직접 관찰, 기술, 설명하는 절대 이동성의 관점이다. 경제적 수준의 시계열적 변화나 부모·

자녀 간 지위 비교를 통해 이동 경로를 직접 기술하는 관점으로, 이는 '세대 간 조건의 불평등'을 진단하는 기초가 된다(Hertel, 2017, p. 14). 두 번째 관점으로 서로 다른 계층 간의 세대 간 이동 경로에 대한 비교를 통해 일부 계층이 경험하는 이동 경로를 다른 계층의 경험 경로와 비교하는 관계적 관점에서 상대적 이동성을 설명하기도 한다(Hertel, 2017, p. 14). 특히 사회경제적 배경이 낮은 집단의 이동 가능성 등 '시작점'의 차이를 고려함으로써 '세대 간 기회의 불평등'을 논의하는 핵심 개념으로 활용된다(Hertel, 2017, p. 14). 즉 절대적 이동성은 부모와 다른 결과를 가진 사람들의 비율을 고려하는 반면 상대적 이동성은 다른 집단에 비해 사회경제적 배경이 낮은 사람들의 이동과 같은 다른 시작점을 고려한다(SMC, 2023, p. 38).

이처럼 자산이동성을 측정하는 방법에는 다양한 방법이 있을 수 있다. 위에서 구분한 것과 같이 한 개인(가구)의 시간에 따른 변화, 즉 세대 내의 이동성을 볼 것인지, 부모와 자녀, 즉 세대 간 이동성을 볼 것인지에 따라 측정할 수 있는 방식은 다를 수 있다. 세대 내 이동성은 패널데이터를 활용하여 한 개인 혹은 가구의 자산 분위 이동이 발생하는지, 절대금액의 증가율 분석을 통해 절대적 이동이 발생하는지 확인할 수 있다. 이때 분위이동, 증가율 등의 지표를 활용하여 측정할 수 있다. 물론 장기간 패널데이터가 축적되지 않는 경우 코호트 분석 또는 횡단면 데이터로 대체하여 분석 가능하다(Iversen et al., 2021).

세대 간 분석은 자녀세대와 부모세대의 소득 또는 자산 수준 변화를 분석하거나 자녀세대와 부모세대의 소득 또는 자산 지위(분위) 변화를 분석하는 방식으로 측정 가능하다. 주요 지표로는 세대 간 소득 탄력성(IGE: Intergenerational Elasticity)을 활용할 수 있다. 이 지표는 부모·자녀 소득 간 상관관계를 측정하는 것으로, 회귀분석(log(자녀소득) $=\alpha+\beta$log(부모소득)$+\varepsilon$)을 통해 계수(β)를 추정하여 세대 간 이동성의 정도를 파악할 수 있다(Blanden et al., 2005). 또한 백분위 변동성(transition matrix)을 통해 세대 간의 상대적 이동성을 측정할 수 있다. 부모·자녀 간 계층 변화율을 추적하기 위해 소득 백분위 변동을 행렬로 두고 이동률을 분석하는 방식이다(Blanden et al., 2005). 이러한 지표들은 부모와 자녀의 연결된 데이터가 구축되어야 분석이 가능하다는 한계가 있다. 그럼에도 소득에 비해 이전 성격이 강하다는 점, 단기간 축적이 어려운 점에서 세대 간 이동성에 특히 주목할 필요가 있다.

이러한 점에서 이 글에서는 세대 내, 세대 간 자산이동성에 대해 가용한 데이터를 활용하여 분석하고자 한다. 자산 탄력성, 백분위 변동성 등의 지표는 하나의 값을 통해 이동성을 비교할 수 있는 이점이 있으나, 이 글에서는 비교의 관점보다는 한국의 사회이동성, 특히 자산이동성의 실태를 파악하는 데 초점을 두고 있다는 점에서 특성별·시점별 분위 이동을 통해 보다 직관적으로 이동성을 진단하고자 하였다.

나. 활용 자료 및 분석 개요

세대 내 및 세대 간 자산이동성에 대해 분석하기 위해 활용한 자료는 한국보건사회연구원의 '한국복지패널조사(이하 '복지패널')' 자료이다. 이 조사 자료는 전국을 대표하는 패널조사로 지역적으로는 제주도까지, 가구 유형으로는 농어가까지 조사 대상 가구에 포함하는 등 전국적인 대표성을 지닌다(이태진 외, 2024, p. 16). 최초 원표본 7072가구로 시작한 복지패널은 패널 노후화, 표본 탈락 등의 문제를 보완하고자 2012년, 2022년 두 차례 표본 추가를 통해 대표성을 확보하였는데(이태진 외, 2024, p. 23), 가장 최근 공개된 19차(소득 기준 2023년) 자료 기준 조사 대상 가구는 7821가구이다(이태진 외, 2024, p. 24). 개인과 가구의 일반 사항은 물론 소득·자산 등 경제적 변수를 모두 포함하고 있어 세대 내 간의 변화를 포착하는 패널 분석에 최적화된 자료이다. 이러한 점에서 이 분석에서는 복지패널 조사 자료를 활용하여 분석하였으며, 개인 특성에 따른 소득과 자산의 분위 변동을 확인하기 위해 개인 단위의 분석을 하였다. 물론 소득과 자산 등의 분위는 가구 기준의 소득과 자산을 활용하여 균등화한 후 분위를 특정하였으며, 이에 대한 분위를 가구원 각 개인에게 동일하게 부여하는 방식으로 분석하였다. 분위 변동을 추적하기 위해 1~19차까지 모두 조사된 케이스만 남겨 균형패널을 구축하였다. 균형패널 분석은 모든 시점에서 관측 가능한 동일한 개체만을 분석하는 것으로 자료의 일관성을 유지하는 장점이 있으나, 패널 탈락에 의한 편의 발생, 장기 추적 과정에서의 대표성 변화 등 분석 및 해석상의 한계를 지닌다.

분석에서 주요하게 활용된 특성 변수는 연령, 성별, 소득계층으로 각각에 대해 간단히 설명하면 다음과 같다. 먼저 연령의 경우 정책 기준의 대상이 되는 '생애주기별 연령' 구분으로 청년고용촉진특별법에서는 만 15~29세를, 청년기본법에서는 만 19~34세를, 지자체별 조례법에서는 만 39세까지를 청년으로 보는 등 연령 기준이 정책에 따라 다르게 적용되고 있다. 이 글에서는 청년기본법에 따라 청년의 연령을 만 19~34세로 설정하고자 한다. 다음으로 만 35~49세를 중년, 만 50~64세를 장년, 65세 이상을 노년층으로 구분하여 분석에 활용하였다. 소득은 가처분소득 기준 5분위, 자산의 경우 총자산[3] 기준 5분위로 구분하였다. 소득과 자산의 경우 가구 기준으로 조사되기 때문에 개인 소득과 자산이 아니라 가구 기준의 소득과 자산을 균등화하여 분위를 구분하였다. 즉 가구 기준의 소득과 자산 분위가 해당 가구원에게 동일하게 부여되도록 하였으며, 연령, 경제활동 상태 등 특성에 따른 이동성 분석을 위해 개인을 기준으로 분석하였다. 자산의 경우 부채를 포함한 총자산과 부채를 차감한 순자산을 활용할 수 있는데, 활용 지표 선정 전 두

3) 총자산 및 부채를 차감한 순자산 기준 비교 시 비슷한 경향으로 분석 결과가 도출되기 때문에 이 연구에서는 경향성을 살펴보는 차원에서 총자산을 기준으로 분석하였다.

자산을 기준으로 전체 대상 자산분위 이동 분포를 분석한 결과 동일한 경향이 도출되었다. 따라서 이 글에서는 자산 특성에 따른 비교에 초점을 두기보다는 자산이동성의 경향성을 살펴보는 차원에서 하나의 기준인 총자산을 기준으로 분석한 결과를 제시하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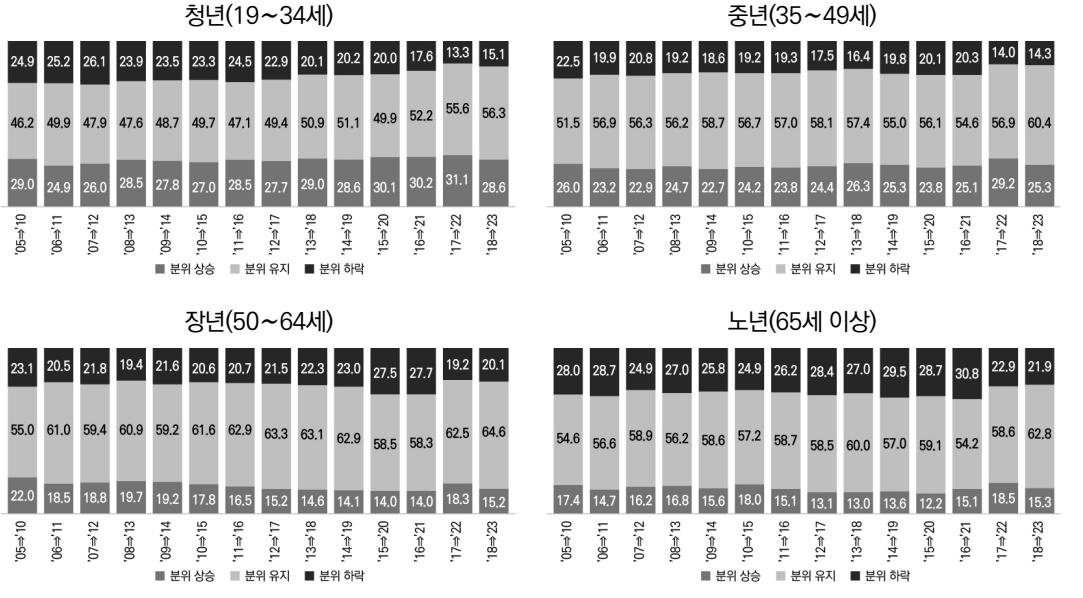
이러한 변수를 활용하여 특성에 따라 자산이동성을 진단하고자 하였으며, 시간에 따른 이동성의 양상을 파악하기 위해 이동성의 주기는 5년과 10년을 기준으로 분석하였다. 5년 주기 분석을 통해 단기간의 변화 양상을 파악함과 동시에 10년 주기 기준 분석으로 장기적인 경향, 실질적인 계층 변화가 발생했는지, 즉 구조적인 방향성을 파악하고자 하였다.

3 세대 내 자산이동성

앞서 정리한 특성에 따라 세대 내 자산 분위 이동 분포를 분석한 결과는 다음과 같다. 먼저 연령대별로 살펴보면 청년층(19~34세)은 자산 분위 이동성이 높아 하위에서 상위로 이동하는 비율(분위 상승)이 다른 연령층에 비해 높게 나타난다. 이는 경제활동이 본격적으로 시작되는 초기 단계이기 때문에 자산 변동폭이 큰 현상으로 해석된다. 반면 중년(35~49세)과 장년(50~64세)으로 갈수록 자산

[그림 1] 연령대별 자산 분위 이동 분포(5년 주기)

(단위: %)



출처: "한국복지패널", 한국보건사회연구원, 2006(1차)~2024(19차), 원자료 분석.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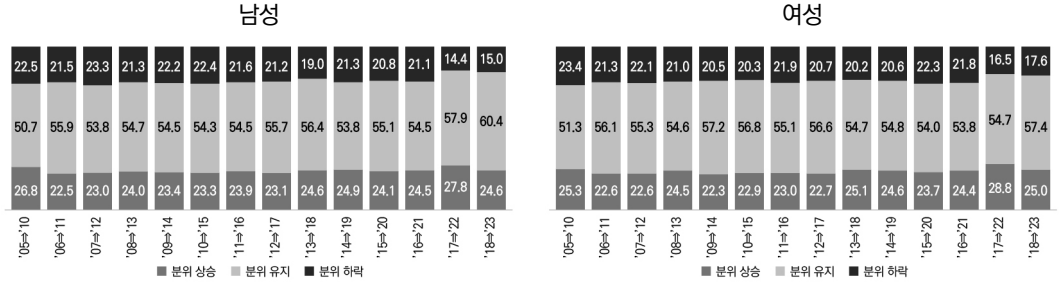
분위의 유지 비율이 증가하고, 이동성이 점차 둔화되는 모습을 보인다. 노년층(65세 이상)은 은퇴 등의 요인으로 소득과 자산이 감소함에 따라 타 연령층에 비해 자산 분위가 하락하는 비중이 상대적으로 높게 관찰된다.

성별로 구분하면 남성은 자산 분위의 유지나 상승 비율이 미미하게 높게 나타난다. 여성은 남성에 비해 자산 분위 하락 비율이 두드러지는데, 이는 결혼, 출산, 경력 단절 등 여러 구조적 제약에 의해 경제활동 지속이나 자산 형성에서 불리한 위치에 놓인 결과로 볼 수 있겠다.

소득계층별로 살펴보면 소득 1분위 및 소득 5분위, 즉 저소득층과 고소득층에서 자산 분위가 상향 이동하는 비율이 소득 중간층에 비해 낮게 나타나는 모습을 보인다. 즉 소득의 양극층에서 자산의 변동성이 낮게 나타나며, 소득 중간계층에서 오히려 자산 분위 이동이 활발한 모습을 확인할 수 있다. 이는 소득 양극화와 계층 대물림 현상이 자산 영역

[그림 2] 성별 자산 분위 이동 분포(5년 주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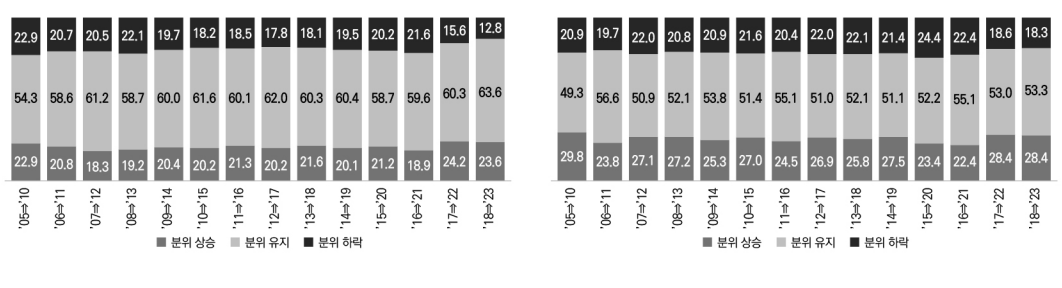
(단위: %)



출처: “한국복지패널”, 한국보건사회연구원, 2006(1차)~2024(19차), 원자료 분석.

[그림 3] 소득계층별 자산 분위 이동 분포(5년 주기)

(단위: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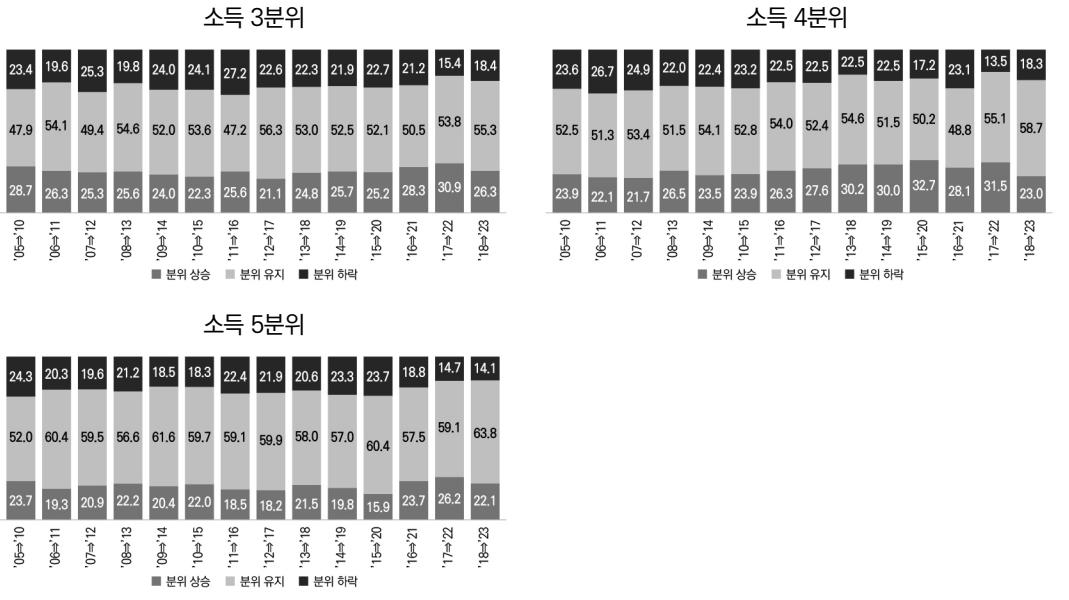


에서도 유사하게 나타나고 있음을 시사한다.

연령대별로 10년 주기를 기준으로 자산 분위 이동을 살펴보면 청년층(19~34세)은 5년 주기보다 훨씬 더 큰 폭의 변동성을 보인다. 5년 주기에서는 동일 분위 유지 경향이 강했으나, 10년 주기에서는 상향·하향 모두 이동 비중이 증가한다. 중년(35~

[그림 3] 계속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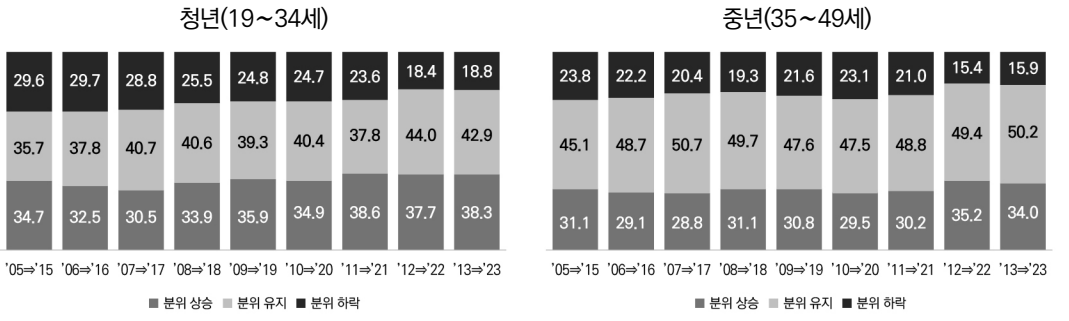
(단위: %)



출처: "한국복지패널", 한국보건사회연구원, 2006(1차)~2024(19차), 원자료 분석.

[그림 4] 연령대별 자산 분위 이동 분포(10년 주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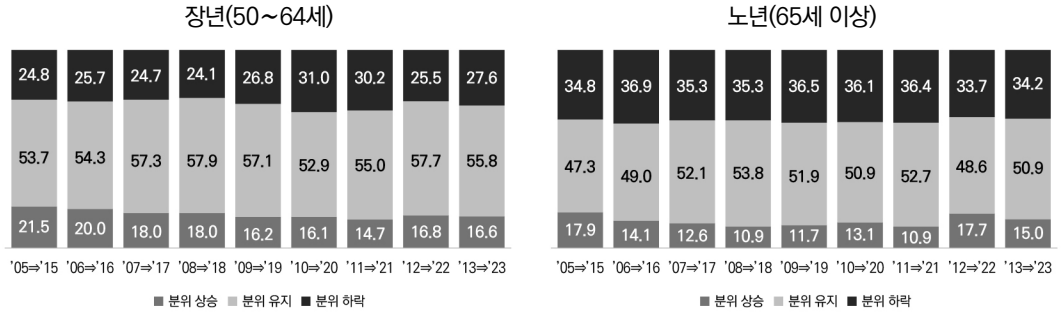
(단위: %)



 DOI: 10.23062/2026.06.4

[그림 4] 계속

(단위: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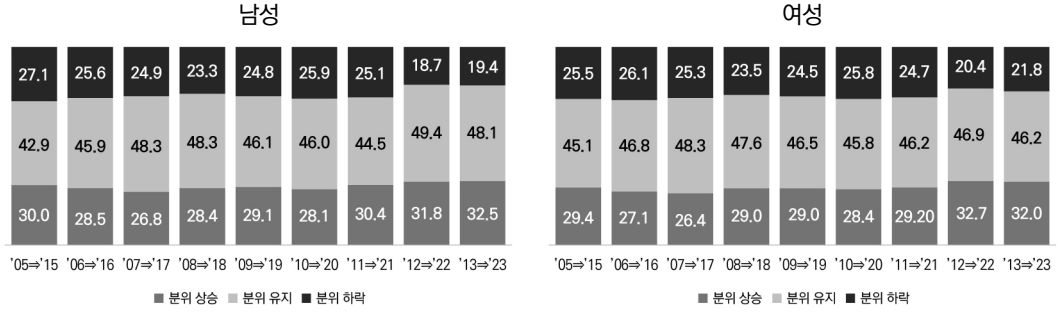
출처: "한국복지패널", 한국보건사회연구원, 2006(1차)~2024(19차), 원자료 분석.

49세)과 장년층(50~64세)에서는 여전히 자산 분위 유지 비율이 높지만, 장기간 동안에는 상향 또는 하락한 집단, 즉 자산 분위가 이동한 비중이 5년보다 커진다. 노년층(65세 이상)은 5년 주기에서도 분위 하락이 주요 현상이었는데, 10년 기준에서는 하락 비율이 훨씬 현저해지며, 은퇴 등 생애주기 변화의 영향이 누적되어 나타나는 것으로 해석할 수 있다.

성별을 구분하여 살펴보면 5년 주기에서는 남성은 자산 분위 유지·상승이, 여성은 하락이 상대적으로 높게 나타났다. 10년 주기에서는 이러한 격차가 더욱 커지는 양상이 보인다. 특히 여성의 하락 분위 경험이 10년 관측에서 더 증가하고, 남성 역시 하락과 상승 모두 경험 비율이 늘어난다. 성별 자산이

[그림 5] 성별 자산 분위 이동 분포(10년 주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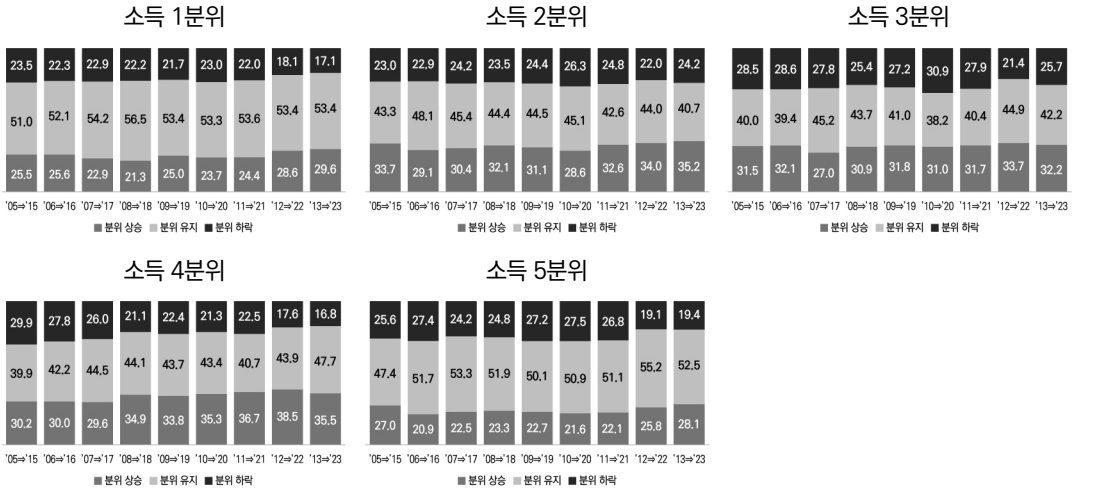
(단위: %)



출처: "한국복지패널", 한국보건사회연구원, 2006(1차)~2024(19차), 원자료 분석.

[그림 6] 소득계층별 자산 분위 이동 분포(10년 주기)

(단위: %)



출처: "한국복지패널", 한국보건사회연구원, 2006(1차)~2024(19차), 원자료 분석.

동성 격차가 단기에 비해 장기적으로도 구조적으로 강화되는 양상이 확연해진다.

소득계층별로 보면 5년 주기에서는 하위 소득계층의 분위 정체, 상위 소득계층의 유지·상승이 강하게 나타났는데, 10년 주기에서는 이러한 격차가 더욱 심화된다. 하위 소득집단은 장기간에도 자산 상향 이동이 극히 희박하고, 상위 소득집단은 오히려 자산 유지·상승 비율이 높아져 계층 대물림·양극화 구조가 강화된다. 주기가 길어질수록 이동성 자체가 어느 정도 커지긴 하지만, 구조적인 계층 고착과 대물림이 사라지지 않고 오히려 확고해지는 특징이 더욱 부각된다.

종합하면 10년 주기 분석은 5년 주기에서 관찰된 계층이동성의 한계, 정체성, 대물림 구조를 전반적으로 동일하게 보이면서 시간의 누적 효과로 인해 자산이동성의 크기와 격차, 계층·세대별 양극화가 더욱 크게 드러난다는 점이 특징이다.

4 세대간 자산이동성

다음에서는 세대 간 자산이동성에 대해 분석하기 위해 분가 가구를 대상으로 분가 전의 부모세대와 분가한 자녀세대의 자산 분위 변화를 살펴보았다. 부모세대와 자녀세대를 비교했을 때, 자산 분위가 유지되는 경우나 상승하는 경우보다 하락하는 경우가 큰 차이로 높게 나타난다. 전체 분가 사유 중 직장(42.5%)과 결혼(33.6%)이 차지하는 비중이 76.1%이다. 그 외 학업, 이혼, 별거 등의 사유

[표 1] 부모세대와 자녀세대의 자산 분위 분포

(단위: %)

〈분가 가구 전체〉

구분		자녀세대 자산 분위				
		1분위	2분위	3분위	4분위	5분위
부모세대 자산 분위	1분위	12.1	2.0	0.9	0.5	0.2
	2분위	11.2	4.4	2.0	1.2	0.2
	3분위	9.8	5.4	4.5	0.9	0.5
	4분위	8.2	5.0	3.8	1.8	1.4
	5분위	6.3	5.3	5.6	4.9	2.4

분위 하락	분위 유지	분위 상승
65.4	25.1	9.6

〈결혼·직장으로 인한 분가 가구〉

구분		자녀세대 자산 분위				
		1분위	2분위	3분위	4분위	5분위
부모세대 자산 분위	1분위	9.9	1.4	1.1	0.2	0.0
	2분위	10.9	3.7	2.1	1.1	0.0
	3분위	8.3	5.6	4.5	0.9	0.5
	4분위	9.7	6.0	4.1	1.8	1.5
	5분위	7.2	5.7	6.7	5.6	1.6

분위 하락	분위 유지	분위 상승
69.8	21.5	8.8

출처: "한국복지패널", 한국보건사회연구원, 2006(1차)~2024(19차), 원자료 분석.

가 존재한다. 학업의 경우 전체 분가 가중 중 0.1%로 비중이 크지 않다. 이혼, 별거 등의 사유의 경우 세대 간 분리의 의미보다는 동일 세대의 가구 분리로 해석될 수 있다. 이 분석이 부모세대와 자녀세대의 비교에 초점을 둔다는 점에서 전체 분가 가구 현상의 76% 이상을 설명하는 결혼과 직장으로 인한 분가 가구에 대해 추가의 표로 제시하였다. 전체적으로 65% 정도가 자산 분위 하락을 경험하는데, 결혼이나 취업 등으로 독립한 경우에도 하락 경향이 더 강하다. 이는 결혼과 직장으로 인한 분가 가구의 특성으로도 볼 수 있는데, 이 시기 자산 축적이 충분히 이루어지지 않은 것에 기인한다고 볼 수 있다. 그럼에도 제한적이지만 세대 간 자산의 상향 이동이 극히 한정적임을 알 수 있는 지점이기도 하다.

앞에서 부모세대의 자산 분위에 따른 자녀세대의 자산 분위를 비교해 보았다면 다음에서는 부모세대의 소득분위에 따른 자녀세대의 자산 분위 분포를 살펴본다. 〈표 2〉에서 왼쪽 표는 전체를 100%로 보았을 때의 분포를 나타내는데, 부모세대의 소득분위가 낮을수록 자녀세대의 자산 분위도 낮게 나타나는 경향을 보인다. 반대로 부모세대의 소득분위가 높을 때 자녀세대 자산의 고분위 비율이 상대적으로 높은 모습이다. 즉 부모세대의 소득분위에 따라 자녀세대의 자산 분위가 결정되는 경향이 강하게 나타난다고 볼 수 있다. 이는 부모세대의 각 소득분위를 100%로 보았을 때(오른쪽 표), 자녀세대의 자산 분위 분포를 살펴보면 더욱 확연하게 나타난다. 부모세대의 소득 1분위의 경우 자녀세대의 약 90% 정도가 자산 1, 2분위에 분포하고 있으며, 소득분위가 높을수록 자산 1, 2분위 분

[표 2] 부모 소득에 따른 자녀세대의 자산 분위 분포

(단위: %)

구분		자녀세대 자산 분위					구분		자녀세대 자산 분위				
		1분위	2분위	3분위	4분위	5분위			1분위	2분위	3분위	4분위	5분위
부모 세대 소득 분위	1분위	**8.2**	**1.3**	0.8	0.3	0.2	부모 세대 소득 분위	1분위	**76.4**	**11.9**	7.1	3.1	1.6
	2분위	**11.1**	**3.7**	2.5	0.7	0.6		2분위	**60.1**	**19.9**	13.3	3.7	3.0
	3분위	**11.0**	3.0	3.0	1.0	0.4		3분위	**60.0**	**16.2**	**16.2**	5.6	2.0
	4분위	9.2	7.5	4.3	**2.4**	**1.3**		4분위	37.3	30.2	17.5	**9.9**	**5.1**
	5분위	8.0	6.6	6.2	**4.7**	**2.2**		5분위	28.9	23.9	22.3	**16.8**	**8.1**

출처: "한국복지패널", 한국보건사회연구원, 2006(1차)~2024(19차), 원자료 분석.

포 비율은 감소하는 모습이다. 반대로 소득 상위 분위 부모세대의 자녀세대에서 자산 고분위에 분포하는 비율이 높게 나타나는데, 특히 부모세대 중 소득 5분위의 자녀세대 중 약 25%가 자산 4, 5분위에 분포하는 것과 대조적인 모습이다. 즉 소득계층이 자산계층으로 이동 혹은 전이되는 구조가 이 분석 결과 나타난다고 할 수 있다. 물론 자녀세대의 구분으로 직장과 결혼으로 인한 분가 가구를 분석했다는 점에서 자녀세대 대부분이 청년층일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 청년층의 생애주기상 특성으로 향후 자산을 축적하며 상위 분위로 이동할 가능성이 높다. 현재의 분석 결과로는 상향 이동이 극히 한정적임을 단정할 수 없다. 다만 부모세대가 소득 고분위에 분포하면서 자녀세대 역시 자산계층의 상단부를 점유함으로써 자산 형성을 통해 상향 이동하고자 하는 다른 집단의 이동성을 역설적으로 제약하는 요인이 될 수 있음에 주목할 필요가 있다.

5 나가며

이 글에서는 자산이동성에 대해 특성에 따른 세대 내 이동성과 부모세대와 자녀세대를 기준으로 세대 간 이동성에 대해 분석하였다. 분석 결과에 대해 간단히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 먼저 세대 내 자산이동성의 경우 5년 주기와 10년 주기를 분석한 결과 10년 주기 분석 결과는 5년 주기에서 관찰된 계층이동성의 한계, 정체성, 대물림 구조를 전반적으로 동일하게 보이면서 시간의 누적 효과로 인해 자산이동성의 크기와 격차, 계층·세대별 양극화가 더욱 크게 드러났다. 주기가 길어질수록 이동성 자체가 어느 정도 커지긴 하지만, 구조적인 계층 고착과 대물림이 사라지지 않고 고착화 경향이 더욱 선명하게 확인되었다. 또한 세대 간 자산이동성을 살펴보기 위해 분가 가구를 대상으로 분가 전의 부모세대와 분가한 자녀세대의 자산 분위 변화를 비교한 결과 자산 분위가 유지되는 경우나 상승하는 경

우보다 하락하는 경우가 상대적으로 높게 나타났다. 전체적으로 65% 정도가 자산 분위 하락을 경험하는데, 결혼이나 취업 등으로 독립한 경우 하락 경향이 상대적으로 더욱 크게 관찰되었다. 이는 세대 간 자산의 상향 이동이 극히 제한적임을 의미한다. 더불어 부모의 소득분위에 따라 자녀의 자산 분위가 거의 결정되는 경향이 강하게 나타났다. 저소득층(1~3분위) 부모 자녀는 대다수 자산 분위도 하위권에 머물고, 반대로 상위 소득층 부모 자녀는 자산 분위의 유지와 상승 가능성이 높다. 즉 소득계층의 영향력이 자산계층의 전이로 이어지는 구조적 특징이 통계적 경향성으로 확인된다.

이러한 분석 결과들을 토대로 자산이동성에 대해 다음과 같이 몇 가지 진단을 해 볼 수 있다.

첫째, 자산이동성의 경우 단기적인 이동성의 결과로 판단하기보다는 장기적인 혹은 실질적인 계층 변화의 관점에서 살펴볼 필요가 있다. 5년 주기 분석에 비해 10년 주기 분석에서 동일 분위 유지 및 양극화 현상이 강화되는 '시간의 누적 효과'가 관찰되었다. 즉 연령별 세대 내 자산이동성에 대해 분석해 보면 청년층의 경우 다른 연령층에 비해 상향이든 하향이든 이동성이 상대적으로 활발한 모습을 확인할 수 있었다. 특히 청년층에서 나타나는 활발한 분위 이동이 결혼, 주거 마련 등 생애주기 과업을 거치며 지속되지 못할 가능성이 크다는 점은 단기적 '변동'을 넘어선 지속가능한 자산 형성 지원의 필요성을 뒷받침한다. 또한 경제위기, 고용시장에서의 불안정 등 외부 충격에 의해 자산 기반이 약한 계층에서는 상향 이동에서 하향 이동으로 반전되는 경우도 있을 수 있다. 즉 이러한 단기적 상향 이동이 일시적인 '변동'일 수 있는 점에서 실제로 지속가능한 실질적인 계층의 상향 이동으로 이어질 수 있도록 장기적 추적 분석과 함께 지속가능한 자산 기반 강화를 위한 정책적 뒷받침이 필요하다.

둘째, 부모의 경제적 배경이 자녀의 자산 분위로 전이되는 '기회의 불평등' 구조가 통계적 경향성으로 나타났다. 특히 부모세대의 소득계층에 따라 자녀의 자산 분위가 결정되는 경향이 나타난 것은 본인의 '노력의 기회'보다 '출발선 위치의 차이'가 자산 계층 결정에 상당한 비중을 차지하고 있음을 의미한다. 개인의 경제활동을 통해 자산을 축적하여 자산 분위의 상향 이동이 어려운 자산 구조가 고착화될 수 있는 것이다. 이는 소득 이동성의 저하보다 사회적 신뢰를 더 강력하게 저해하는 요인이 될 수 있다는 점에서 주목할 필요가 있다.

셋째, 성별 및 연령 등 인구사회학적 특성에 따른 자산이동성의 차이는 복합적인 구조적 요인이 투영된 결과로 해석할 수 있다. 여성의 자산 분위 하락 비중이 상대적으로 높거나 노년층의 자산 하락이 두드러지는 현상은 은퇴, 경력 단절, 생애주기별 자산 소비 등의 요인과 밀접한 관련이 있을 것으로 보인다. 이 연구에서 각 요인의 인과적 기여도를 직접 분석하지는 않았으나, 이러한 경향성은 자산 형성과 유지 과정에서 성별·연령별로 서로 다른 구조적 제약이 작용하고 있을 가능성을 강력히 시사한다.

종합하면 자산이동성의 약화는 개인의 경제적

성과 차이를 넘어 사회적 사다리의 복원력을 상실케 하는 구조적 위기이다. 즉 '자산'의 특성에 주목할 필요가 있다. 예컨대 소득의 경우 경제활동을 통해 수입이 증가한다면 소득의 단기적인 상향 이동을 꾀할 수 있는 기제가 있다고 볼 수 있다. 반면 자산은 단순한 수입 개념이 아니라 부동산, 금융자산 등 누적 자원의 증가가 이루어져야 한다는 점에서 장기적이고 세습 경향이 높다고 볼 수 있다. 또한 소득은 교육을 통한 직업의 선택, 창업 등 개인의 노력으로 극복할 수 있는 결과로 여겨지는 반면 자산은 부모세대의 초기 지원 유무에서 결정되는 출발선 자체로 여겨질 가능성이 높다. 따라서 제도적 장치와 시스템이 사회 내에서 제대로 작동하지 않을 경우 사회구조에 대한 불만이 증가할 수 있다. 자산의 특성상 단순한 '수입'이 아니라 '기반'이 될 수 있는 점에서 자산이동성의 저하는 소득이동성의 저하보다 사회적 신뢰 저하로 이어지는 강력한 연결고리일 수 있다는 것이다. 이러한 점에서 상속 및 증여세의 실효성 제고를 통해 부의 과도한 집중을 완화하는 한편 계층이동 사다리를 복원하는 교육, 고용, 주거 등 통합적이고 국가적인 정책과제에 대한 고민이 필요하다.

이 글의 분석에서는 고려하지 못한 몇 가지 한계가 존재한다. 먼저 이 분석을 통해 자산 계층 간 분위 이동을 살펴봄으로써 상대적 위치의 변화를 진단하는 것은 가능하였지만, 실질적인 자산 수준의 개선이 발생하였는지 확인하지 못한 한계가 있다. 소득의 경우 절대적 기준이 되는 정부 발표 기준 중위소득이 존재한다는 점에서 소득계층의 절대적 이동성을 파악할 수 있는 반면 자산의 경우 기준이 되는 수준을 특정하기가 어려운 한계가 있다. 또한 한국의 자산 구조 특성상 부동산 등 실물자산의 영향이 크게 나타날 가능성이 존재한다. 자산의 구성 항목별을 세부적으로 분석한다면 자산 격차의 원천을 좀 더 확연하게 파악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된다. 심층분석을 통하여 정책적·제도적 접근이 가능할 것이다. 이러한 점을 고려하여 후속 연구 시에는 정책, 제도 환경에 대한 영향 요인을 함께 파악한다면 풍부한 해석을 담을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참고문헌

김태완, 김기태, 김문길, 임완섭, 이주미, 조보배, 장윤선, 김한나, 박형존, 윤상용, 이석민, 권신정, 김우성. (2025). 한국의 사회이동성 진단과 사회정책 개편방향 연구. 한국보건사회연구원.

이태진, 류진아, 강예은, 남윤재, 신재동, 정주성, 정유림, 송지은, 이원진, 이봉주, 강상경, 박정민, 정원오, 임은정, 김건, 김태형. (2024). **2024 한국복지패널 조사·분석 보고서**. 한국보건사회연구원.

한국보건사회연구원. 한국복지패널조사 1~19차 원자료.

Adermon, A., Lindahl, M., & Waldenström, D. (2018). Intergenerational wealth mobility and the role of inheritance: Evidence from multiple generations. *The Economic Journal, 128*(612), F482–F513.

Becker, G. S., & Tomes, N. (1979). An equilibrium

theory of the distribution of income and intergenerational mobility. *Journal of political Economy, 87*(6), 1153–1189.

Berman, Y., & Milanovic, B. (2023). Homoploutia: top labor and capital incomes in the United States, 1950–2020. *Review of Income and Wealth, 70*(3), 766–784.

Blanden, J., Gregg, P., & Machin, S. (2005). *Intergenerational mobility in Europe and North America*. Centre for Economic Performance, London School of Economics.

Boserup, S. H., Kopczuk, W., & Kreiner, C. T. (2018). Born with a silver spoon? Danish evidence on wealth inequality in childhood. *The Economic Journal, 128*(612), F514–F544.

Clark, T. (2024). *Earning vs Owning: Rescuing Opportunity in the Asset Economy*.

Erikson, R., & Goldthorpe, J. H. (1992). *The constant flux: A study of class mobility in industrial societies*. Clarendon Press.

Fagereng, A., Mogstad, M., & Rønning, M. (2021). Why do wealthy parents have wealthy children? *Journal of Political Economy, 129*(3), 703–756.

Glass, D. V. (Ed.). (1998). *Social mobility in Britain* (Vol. 16). Taylor & Francis US.

Goldthorpe, J. H., Llewellyn, C., & Payne, C. (1987). *Social mobility and class structure in modern Britain*. Clarendon Press.

Hällsten, M., & Thaning, M. (2022). Wealth as one of the "big four" SES dimensions in intergenerational transmissions. *Social Forces, 100*(4), 1533–1560.

Heath, A., & Li, Y. (2023). *Social mobility*. John Wiley & Sons.

Hertel, F. R. (2017). *Social mobility in the 20th century*. Springer VS.

Huband-Thompson, B. (2024). The opportunity effect: how social mobility can help drive business and the economy forward.

Iversen, V., Krishna, A., & Sen, K. (2021). *Social mobility in developing countries: Concepts, methods, and determinants*. Oxford University Press.

Mill, J. S. (1848/1885). *Principles of Political Economy*. D. Appleton and Company.

Roemer, J. E. (2004). Equal opportunity and intergenerational mobility: going beyond intergenerational income transition matrices. In M. Corak (Ed.), *Generational income mobility in North America and Europe* (48–57). Cambridge University Press.

Social Mobility Commission(SMC). (2023). *State of the Nation 2023: People and places*.

An Exploratory Analysis of Asset Mobility

Lee, Jumi

(Korea Institute for Health and Social Affairs)

This article explores social mobility in Korea with particular reference to assets—resources that are readily transferable across generations and therefore help maintain the socioeconomic status of upper-class families over time, independently of labor-market outcomes such as education, occupation, and income. Using data from the Korea Welfare Panel, the analysis found that, with respect to intragenerational asset mobility, asset disparities became increasingly pronounced both between social classes and within age groups, particularly over a 10-year interval compared with a 5-year interval, indicating cumulative effects over time. The intergenerational analysis suggested that parental income class influenced the initial distribution of children's assets and revealed a mechanism through which income-class advantages are transformed in part into asset-class advantages and transmitted across generations. The findings imply that asset mobility should be assessed not in terms of short-term fluctuations but from a long-term structural perspective. The study also offers suggestions as to how future research could go beyond the limitations of the present study in exploring asset mobility.